“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호남정치 활로 찾아야”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설문

4년 중임제땐 정·부통령 도입을
개헌 앞서 정치개혁 우선 주장도
개헌 방법·시기에는 이견

광주일보의 개헌 관련 설문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개헌에는 모두 찬성했으나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의 방법과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정권 창출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개헌을 통해 호남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의 방법론**=4년 임기의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8명의 의원들이 선호,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대통령 중임제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통령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호남 대통령 후보에 영남 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나서거나 또는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게 되면서 호남과 야권의 정권 창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5년 단임제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려워 대통령 중임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5명이나 됐다. 특히 대립적 양당제가 지속되는 한 호남의 활로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다당제 정치체제 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총리는 다수 당이 차지하는 이원집정부제가 도입되면 호남 정치 세력이 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각제도 다수당이 총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호남이 캐스팅 보트를 형성할 수 있다. 다만, 보수 세력이 지역적 연대 등을 통해 일본의 자민당처럼 장기 집권에 나서면서 ‘호남의 고립’이 고착화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개헌 시기**=대선 전과 대선 후로 엇갈렸다. 대선 전을 지지한 의원들은 여야 정치권이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전면적으로 나선다면 박 대통령의 반대에도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봤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선 이후 개헌 추진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반대와 정파적 이해관계가 겹쳐 현실적으로 개헌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 개헌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워 20대 국회 내에 개헌을 이루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 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 밖에도 개헌 내용에 지역균형발전을 담고 법률로 뒷받침, 호남 발전의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 자치를 대폭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의 활로를 찾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적극적인 것 같다”며 “하지만 4년 중임제는 현 국회의원 임기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총리가 수시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헌에 앞서 정치 개혁과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檢과 끈질긴 악연 이제 끊고 싶다” 저축은행 사건 4년만에 무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한 족쇄를 4년 만에 완전히 벗어던졌다.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4년 만에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한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진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이전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4년 전 제가 검찰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누구도 저의 결백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부로 끝났다”며 소감을 올렸다.

그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말씀을 올린다”면서 “사실 검찰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저로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검찰에) ‘어떻게 사고 난 회사에서 현역 의원이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을 했지만 막무가내였다”면서 “저는 지난 정치생활 중 9번의 크고 작은 사건으로 검찰의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그때마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겠지만, 검찰도 개혁하지 않으면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며 “저와 검찰의 이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더민주·국민의당 ‘도덕성 악재’ 정면돌파

‘가족 채용’ 서영교 감찰 착수·“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엄정 대처”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몰린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의당은 2명의 소속 의원과 1명의 당직자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소환 예정으로 파문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더민주 역시 서영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야당 모두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목소리를 연일 높이던 와중에 당 내부 도덕성 악재가 나타나자 어렵게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의 정국 장악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두 야당은 조심스런 분위기 속에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의 이른바 ‘가족채용 논란’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이번 논란의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민주는 26일 김조원 당무감사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전날 당무감사원이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당헌·당규에 따라 감찰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원칙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거침없는 수사를 이어가자 점차 당 내부를 향한 ‘엄정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며 “국민 정서와 당헌당규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실제 당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박영선도 불출마… 비주류 후보 없는 더민주 전대

범주류 국회의장·원내대표 등 장악… 이종걸·신경민 출마 여부 고심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진영이 차기 당권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8·27 전대 출마를 고민하던 김부겸·박영선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비주류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8월말 전당대회가 주류 진영의 후보들 위주로만 치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당권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는 인사 가운데 비주류 진영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이종걸·신경민 의원 정도다. 이들도 비주류의 세가 너무 약하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6일 “주변 분들과 세를 규합해 보려 한다”면서도 “(비주류 진영이)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양강 구도를 형성한 추미애·송영길 의원은 모두 범주류 인사로 분류된다. 주변에서 권유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원혜영 의원이나 거취를 고민 중인 김진표 의원도 범주류 인사다

비주류 인사들의 행보가 위축된 데에는 최근 계속된 당내 경선에서 약화한 비주류의 힘이 고스란히 드러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선 직후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주류 진영은 86그룹·범주류 후보들인 우상호·우원식 후보의 결선투표를 바라만 봐야 했다.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범주류로 분류되는 정세균·문희상 후보가 121표 중 106표를 가져갔다.

정치권에서는 더민주에서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주류 진영으로 힘의 균형추가 확연하게 쏠리면서, 비주류 진영에는 최소한의 견제를 할 힘도 남지 않았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많다.

이처럼 주류 진영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전대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당이 획일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이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모습으로 비친다면 확장성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주류 진영의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까지 생각한다면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을 비롯해 여러 인사들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현재 당내 역학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여서 대선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